

특별기고

전남광주특별시에 주택관리사 채용해야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통합되기 전 광주시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급율이 가장 높다. 당연히 주거용도 최고다. 광주 남구청은 4년 전에 주택관리사 계약직 공무원 채용했다. 대민 서비스 질은 입증됐다. 남구청 내부에서도 주택관리사 채용에 대해 잘했다고 박수를 보낸다. 전남지역에서도 순천시청과 광양시청이 주택관리사를 개방적으로 채용했다.

광주 남구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다른 광주 4개 구청은 묵묵부답이다. 뭐가 문제인가? 단체장 인식의 차이다. 대민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 그런 점에는 공무원의 역할은 기상천외한 다양한 민원을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민력을 높인다고 공무원 사회가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 '공무원을 믿어라'라고 말한 모 단체장의 모습에서 광주의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딱 막힌 보수적인 구조인지를 보여줬다.

공무원을 믿어라'가 아니다. 공무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사회를 만능 통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했다. 주택이 거의 공동주택으로 바꿨다.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산다. 현재의 공무원 업

무량으로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전하기까지 하다. 그 노고에 응원을 보내고 싶지만, 오히려 답답한 지자체장들의 눈먼 정력에 탄진을 보내고 싶다.

그나마 북구청은 오래 전부터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설치해 민관 공동으로 공동주택 문제에 대처해 왔다. 최근에 지어진 북구청 신청사 건물에 별도의 '상담센터' 방을 두고 있다. 지자체장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서구청도 갈등이 심한 단지에 비상근 상담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광주·전남이 통합됐다. 통합특별시장이 뿔혀 7월 1일부터 하나의 공동체 지방 정부가 출발한다. 오래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맡겼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과 경기도다.

이 바람은 중부권으로 내려오다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막혔다. 민주화 도시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광주·전남 공무원 사회가 가장 보수적으로 전국에 비할까 싶다.

선거 기간 중,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이 유세장에서 홍보물로 쓰인다. 제발 대통령의 정책 루틴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광주 지자체장들의 인식이 바졌으면 좋겠다. '공무원을 믿어라'가 아닌 함께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새로 통합된 시민의 주거 정책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열려스럽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공동주택에서 문젯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계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고지서 발행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아파트에서 불거진 민원으로 인

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또 하나의 갈등의 빌미가 된 지 오래였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때렸다고 피해갈 일이 아니다. 그 많은 과태료가 비송사건으로 가서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경기도 내 행정관청에서 부과된 과태료 중 68%가 취소되거나 감액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고민이 없을까? 공동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왜 애정이 없을까?

주택관리제도를 위해 주택관리사 제도를 만들었다.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는 결국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누려야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아직껏 민관이 머리 맞대고 정책을 만들 자리도 없었다. 단적으로 시청과 5개 구청 담당주무부서 공무원들과 직능단체 간의 서로 정보를 공유할만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기회도 없었다. 왜 이리도 통로가 막혔을까? 지자체장 탓이다.

우리 사회는 공무원을 믿는다. 공무원은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둥만이 아니라 주춧돌도 있고, 보가 있고, 지붕도 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버티는 시대는 지났다. 공무원 시험이 자랑스러운 수는 있어도 능사는 아니다. 다양한 집단이나 경력자의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때가 됐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공무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뛰어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의 바람과 욕구는 더 다양해졌고, 혼란스럽다. 공무원 사회 문턱을 높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남구청의 4년간의 사례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고

경계 없는 하늘, 드론으로 그리는 광주·전남 미래

설향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난해 광주시가 드론을 활용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 우리 앞에는 그보다 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밀려오고 있다.

두 지자체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이 역사적인 전환기 속에서, 드론은 이제 단순한 장비를 넘어 초광역 스마트 행정의 가치를 있는 실질적인 가교이자 강력한 추진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적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해 고정밀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토지 행정의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왔으며, 기존 방식 대비 업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토지 경계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부터 산림 방제 에 이르기까지 드론

을 투입해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매워왔다.

이러한 성공 모델은 이제 행정통합이라는 전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더 넓은 행정 현장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행정통합으로 관리 지역이 광활해짐에 따라 드론의 역할은 더욱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영산강 줄기를 따라 광주와 나주를 유기적으로 잇는 수질 모니터링부터, 사·도 접경 지역의 산불 감시와 수해 취약 지역 대응에 이르기까지 드론은 지자체 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실시간 재난대응 시스템의 핵심 역할도 푼다 해낼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드론의 가치는 빛난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정밀 분석하고 농촌의 가 목 상황을 진단하며, 대기 오염원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환경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생의 시너지는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이어진다. 무등산의 기가에서 남도 바닷길의 정취까지 단절 없는 VR 관광 콘텐츠를 구현함으로써, 남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온전히 선사하는 새로운 관광 지평을 열 수 있다.

우리 시는 이미 2022년부터 소속 직원들이 드론 비

행 및 교관 자격을 직접 취득하며 실무 역량을 내재화해 왔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공직자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축적한 노하우는 행정통합 이후 전남의 풍부한 인프라와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드론 행정 메카'를 만드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드론은 단순한 활용 장비를 넘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최적의 정책 의사결정을 돕는 '지능형 행정'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광주와 전남의 하늘은 하나다. 행정의 물리적 결합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합을 통해 어떻게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드론이라는 하늘 위의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우리는 더 넓은 행정 지도 위에서 더 세밀하고 독특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드론의 프로펠러는 광주를 넘어 전남의 산과 들, 바다를 향해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 더 높고, 더 멀리 비상하며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 광주·전남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취재수첩

자산관리의 출발, 청년 투자

엄재용

경제부 기자



"친구의 권유로, 혹은 경제 공부를 위해 주식투자 동아리를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종목 분석과 시황에 대해 대화하는 게 아주 흔한 일상입니다."

최근 조선평대학교에서 만난 한 대학생의 말은 요즘 대학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코스피에 대학가에서도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대학생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향한다.

투자 동아리는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는 실전 학습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증시는 중동 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시장이 하루에도 크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금융을 배우려는 분위기가.

실제로 투자 동아리 지원자가 늘고 전국 대학 연합 활동도 확대되면서 금융 학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투자 동

아리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위험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가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목 분석, 경제 이슈 토론, 모의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금융의 기본 원리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진 지금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일 수 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 경험이 투자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장의 위험과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더 이상 일부 전공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일수록 금융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했느냐다.

변동성이 커진 증시 속에서 대학가 투자 열기가 단기 투자가 아닌 금융 교육과 장기적 자산 관리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설

'치킨플레이션' 현실화 우려...대책마련 절실

치킨플레이션(Chickenflation)은 '치킨(chicke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원래는 치킨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을 빗대 만든 신조어다. 202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유행된 용어로 치킨 프랜차이즈의 잦은 가격 인상으로 치킨 값이 배달료까지 합쳐 3만원대까지 치솟자 확산됐다. 이에 이른바 '치맥'·'치킨집' 이용이 줄어든 대신 가성비 대체재였던 냉동·즉석조리 치킨 수요는 늘어난 현상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대체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치킨플레이션을 걱정할 처지가 됐다.

고환율·사료비 상승 등 악재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장기화 영향 등으로 닭 원재료 값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즉,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삼계탕, 냉동·즉석조리용 등 닭 관련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축산유통정보 다봄(KAPE)을 보면 지난 5일 기준 광주 육계 소매가격은 kg당 각각 5895원으로, 1년 전 같은 날(4914원) 대비 981원(19.9%)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2.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은 78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세종(7545원), 인천(7300원) 등 7000원을 넘긴 지역도 많았다.

여기에 육계 도축 마릿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올해까지 확산되면서 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닭인 육용 종계를 172만 마리나 살처분했다.

이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육계 도축 마릿수를 평년보다 4.2~2.3% 줄어든 6071만~6196만마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5월에도 평년보다 8.0~6.0% 감소한 6163만~6294만마리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치킨 가격이 소비가 늘어나는 프로야구 시즌 개막과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외식업계의 대표 인기 메뉴인 치킨이 체감 물가가 아닌 진짜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높다.

정부의 종란 수입, 입식 확대 등을 통한 공급량 확대와 육통 단계 할인 지원 등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전남서 1인 창조기업하기 힘든 이유

전국적으로 증가세인 1인 창조기업이 광주·전남에서는 거의 '불모지'다. 두 지역을 합친 1인 창조기업 비중이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해 서다.

여기서 1인 창조기업은 주로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는 개인이 창업을 통해 매출·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3인 규모의 가족기업이나 스승·제자 관계로 운영되는 도제기업도 포함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 유연한 의사결정과 빠른 시장 대응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는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창조기업은 전국에 116만2529개로 전년 대비 15.4%나 증가했다. 지식서비스와 정보통신 기반 업종이 집약된 수도권은 경기(29.4%), 서울(22.5%), 인천(5.5%) 등 57.4%로 절반을 훌쩍 넘겼고 나머지 42.6%가 비수도권이다. 이중 광주·전남은 각각 2만7900여개(2.4%), 3만1380여개(2.7%)로 하위권이다. 이는 자본과 인력,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지역 현실과 무관치 않다.

1인 창조기업 형태들이 대부분 전자 상거래, 지식서비스 등 향후 유망 분야인 디지털 기반 산업인데 반해 광주·전남은 농림어업과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아 신산업 중심 창업 확산이 쉽지 않다. 지역 창업보다는 수도권에 이동해 창업하는 '창업 유출'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또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층 중심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제약 요소다. 여기에 시장 규모까지 제한적이어서 창업 이후 안정적인 매출 확보 또한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창업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이에 따라 제조 기반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주·전남의 1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관광 콘텐츠, 고유 브랜드 등 지역 자치단체들만의 차별화된 전략마련도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를 체결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